

충남리포트 제237호

ChungNam Report

2016. 9. 2.

충남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일자리정책 과제

이 상 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leesanghob@naver.com

본 연구는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일자리정책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음.

요 약

- 지역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역일자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 그러나 지역산업과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지역일자리창출전략에 대한 모색과 실험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정책을 제안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 산업지역과 농어업이 중심인 중남부지역으로 고용구조의 특성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권역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역노동시장의 권역화를 산업발전전략과 연동해야 한다는 것임. 충남 ‘북부권역’은 기존 제조업 일자리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 지역 주력산업 육성전략을 구사해야 함.
- 한편 타 시도와 접경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경제협력권차원에서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산업 등에 대한 일자리전략이 필요.
- 이와 달리 ‘중남부권역’은 농어업과 함께, 지역연고 및 특화산업육성전략이 일자리사업과 결합되어야 함.

CONTENTS

< 요 약 >

1.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지역
2.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3.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권역화
4. 충남지역 일자리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5. 향후 충남 지역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지역 ◀

01

- 최근 들어 지역차원의 고용문제가 지닌 중요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창출의 원천이 지역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개발되고 있음.
- 그러나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정책과 일자리사업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조정되지도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고용정책이 각 기관 및 부처 간 협력적 관계에 의거해 추진되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면서 유사 중복성 등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지역일자리정책이 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일자리정책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본 글은 충남지역을 분석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지역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평가하여 지역일자리정책의 개선과제를 찾는 데 목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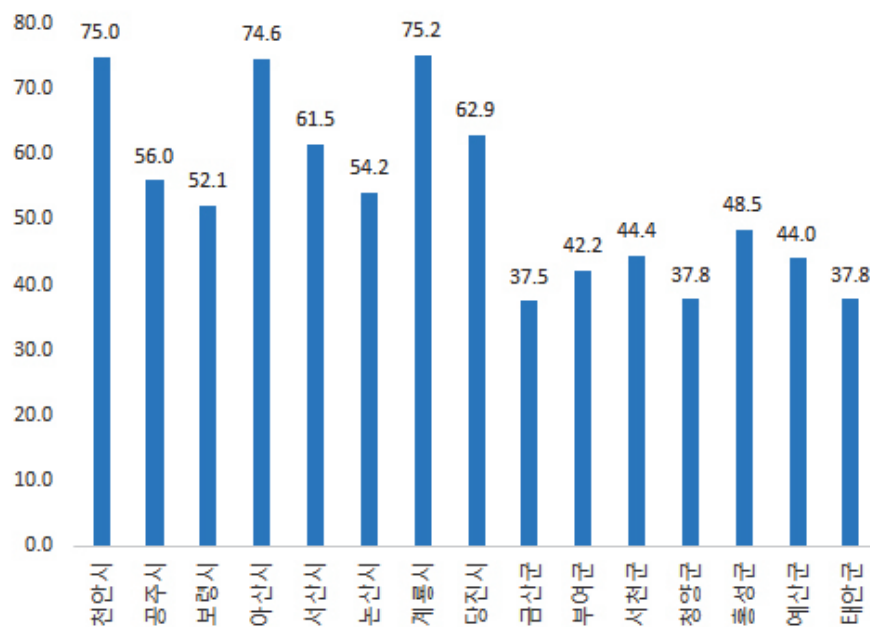
- 고용친화적 사회경제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일자리창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정책과제를 해결해야 함.
- 먼저 지역산업의 고용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IT산업,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재부흥전략의 일환으로 제조업의 생산구조를 다변화하고, 소재, 부품 및 뿌리 산업 육성을 지방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해야 함.
- 지역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더 많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과 조화, 더 나아가 결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기업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함.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함.
 - 산업융복합 시대에 걸맞는 역량있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인력수급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함.
-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일자리중심으로 재편해야 함.
 - 지역산업정책의 목표를 지역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함. 지역산업의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연관 기업과 관련 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자산과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사회적 경제활동은 개인서비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지역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부문과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지역적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지 못하고 있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역할을 수행.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나은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지역일자리전략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

03

▶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권역화

- 기존 충남지역 고용 및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와 함께 2015년 <지역별 고용조사> 등 지역별 특성 자료를 분석함.
- 그 결과, 제조업-서비스업 중심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충남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음



〈그림 1〉 2015년도 15개 시군별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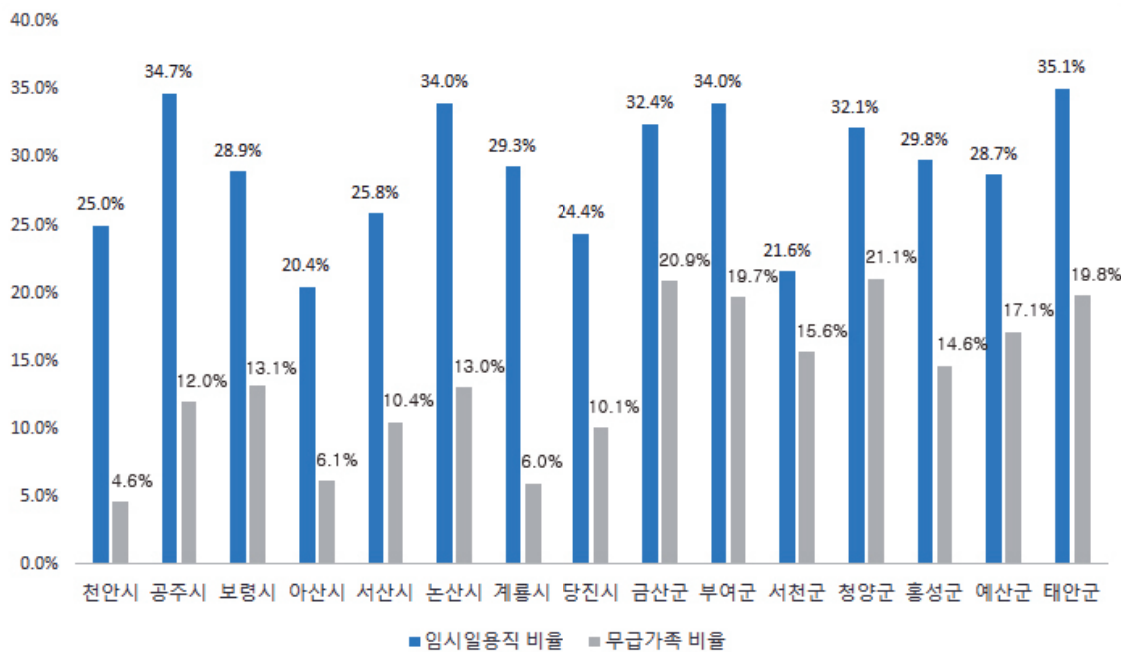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 충남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평균비율은 약 62.1%이며, 15개 지역 중에서 임금노동자 비율이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계룡시 등이 높게 나타남

- 도내 북부지역은 임금노동자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이 높고, 임금수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일자리도 풍부하면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들이 집중되어 있음

● 한편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금산군 등 중남부지역들은 농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임금노동보다 관습적·비제도화된 형태의 무급가족노동의 비중이 높음. 또한 취업자는 고령의 저학력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취업자 비중도 높음.



〈그림 2〉 2015년도 15개 시군별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 출처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 직종은 농림어업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았고 임금수준은 충남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비교적 짧음.

● 이를 통해 충남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지역의 산업지역과 농어업이 중심인 중남부 지역으로 노동시장과 고용의 특성들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권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04

▶ 충남지역 일자리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 충남의 기존 지역 일자리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고용노동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새로운 지역 일자리전략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충남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역 일자리추진전략은 중앙정부와의 협업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신규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보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가 있음.
 - 이를 위해 일자리종합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센터 등 일자리사업 지원체계를 재정비함.
 - 또한 중장기 경제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는 [충남경제비전 2030]이 설정하고 있는 5대 목표 중의 하나인 ‘창의적 인재 육성 및 좋은 일자리창출’은 사실상 지역일자리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그 외에 ‘차세대 성장산업 지원과 혁신생태계 조성’,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거점’등 주요 목표들은 간접적으로 지역일자리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일자리대책의 핵심과제이기도 한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조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의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충청남도의 고용실적은 계획 초기에 설정한 목표에는 다소 미달되는 결과를 낳음.

- 15세 이상 고용률의 경우 목표치인 63.5%에 1.1%가 모자라는 62.4%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여성층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청년우수인력들의 수도권지역으로 유출현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
-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여 수행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이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살펴봄.
- 충남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들 간에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물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도 충남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 및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미 고용전략개발포럼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된 상태에서 사무국의 통합력을 높이고 업무분담과 공조를 보다 강화해야 함.
 -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서 업종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경우 지역수준의 업종별 인력수급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이런 점에서 업종별 분과위원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충남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심의 및 선정과정에 참가하고, 지원조치와 협력구조를 마련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 지역고용심의회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의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의 심의 및 선정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최소한 충남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본협의회, 혹은 실무협의회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이라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충남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지역일자리사업 간 유사 중복성을 막고 연관사업 간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고용거버넌스로 거듭 날 수 있음.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실행전략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함. 기존 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고용정책 및 일자리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유사중복사업을 재조정하고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해 거래비용을 줄여야 함. 실효성을 지닌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사업의 검증체계를 강화해야 함.
- 사업유형별로 전달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지역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는 사업특성이나 소관부처 등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적합한 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지역 일자리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개별 사업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양적 성과만이 고려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단위가 아니라, 전체 고용목표와 연계하여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성과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함.

향후 충남지역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

05

- 충남지역 일자리정책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유형에 따라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함.
- 충남은 행정구역과는 별도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차별화된 지역 일자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산업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시군단위로 편재된 행정구역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별도로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맞지 않음.
 - 노동시장의 구조가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숙련, 산업소속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이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각 대상 집단별로 차별화된 지역고용정책 수립이 필요.
 - 제조업 중심의 북부지역과 농어업중심의 중남부지역으로 구별되는 광역노동시장권에 대응하는 지역 일자리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특정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인프라 조성으로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간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남이 지역성장의 과실을 낙후지역으로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지역균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야 함.
 - 충남 차원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역인력양성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함. 특히 상당수의 우수인력들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또한 지역 내 성장산업의 유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청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숙련교육 및 직업훈련제도를 마련해야 함. 충남지

역의 제조업 인력수요가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훈련사업이 필요.

● 충남지역 노동시장의 권역화를 산업발전전략과 연동해서 살펴보면, ‘북부권역’은 기존 제조업 일자리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전략을 구사해야 함.

- 먼저 피고용인수에 있어 최대치를 보이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 고감성, 기술융합형 부품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클러스터로서 지역산업단지의 입지경쟁력을 높여야 함.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혁신을 통한 부품공급사슬의 부가가치 창조능력을 높여서 자동차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함.
- 한편 중심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우 기술융합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 등 지속적인 확장전략을 추진해야 함.
- 또한 지역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우 신생클러스터의 구성에 걸 맞는 기업유치 및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그리고 충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고 고학력자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조기업과 기업서비스업 일자리를 이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고용창출전략을 고민해야 함.

● 한편 세종시, 대전시, 그리고 충북, 전북 및 강원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경제협력권차원에서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산업 등에 대한 산업육성전략과 인력양성전략을 다른 광역지자체의 일자리사업들과 결합시키는 노력이 필요.

- 이차전지산업은 충남북간 기술 및 인력지원 및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계부품산업은 천안과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허브를 구축하고 세종시 근접지역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 기능성화학소재산업은 대전의 기술 및 부품소재업체들이 충남지역의 제조 및 생산업체들에게 공급하는 광역지자체 연계형 가치사슬을 구축해 원가경쟁력을 높여야 함.

● 이와 달리 ‘중남부권역’은 고령, 여성, 농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과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에 중남부권역은 기존 농업 특성을 고려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농업기반 산업발전 전략을 고민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무급가족 종사자들의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농어업 기반 산업화전략을 통해 지역내 총생산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북부권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취업자들의 소득수준 격차도 줄여나가는 일자리정책이 필요.

● 이에 ‘충남부권역’은 농어업과 함께, 지역연고 및 특화산업육성전략이 일자리사업과 결합되어야 함. 지역연고산업인 재제조산업, 전통생활도자기산업, 청양그린웰니스사업, 보령머드마케팅지원사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전략이 필요.

- 또한 금산 인삼, 한산 모시, 공주 공예와 같이 지역 풀뿌리기업들이 특화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육성전략도 필요. 이들 사업은 기존 지역산업의 특성을 근거로 하여 사업 확장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혁신센터와 같은 지원인프라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재편해야 함.

이 상 호 정책연구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2-784-6721, leesanghob@naver.com

※ 본 리포트는 2016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청남도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일자리정책의 과제」를 요약한 것임.

◆ 참고 자료 ◆

김주일 외(2014), 「2014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 및 협의회 발전방안 연구」, 노사발전재단.

신동호 외(2011), 「고용정책개선을 위한 지역노동시장 분석 연구」, 충남연구원

이상호 외(2015), 「유형화와 지역고용정책의 개선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전병유 외(2011), 「평가 및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 연구」, 고용노동부.

정만태 외(2012), 「일자리창출중심의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 산업연구원.

충청남도(2015a), 「2015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충청남도(2015b),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15년도 충청남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충청남도(2016a),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16년도 충청남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충청남도(2016b),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2015년도 충청남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OECD, 2014, Job Creation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OECD Publishing.

충남리포트(2016년도)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6-01	행복한 성장을 위한 꿈과 도전, 충남경제비전 2030	강현수 외 2명	2016.01.04
2016-02	공공부문 개혁 요구와 충남에 대한 시사점	김대호	2016.01.07
2016-03	민주주의 패스पोर्ट를 통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욱 외	2016.01.14
2016-04	금강 중하류의 물 환경 특성과 큰빛이끼벌레 서식에 따른 대응방안	정종관	2016.01.20
2016-05	충청남도 제조업 개별단지 관리방안	오용준	2016.01.28
2016-06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김용현	2016.02.04
2016-07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윤태범	2016.02.12
2016-08	충청남도 지역경제 생산성의 특징과 정책 과제	이종윤 · 임재영	2016.02.17
2016-09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한상욱 · 임형빈	2016.02.19
2016-10	지역에너지 전환과 충남의 에너지정책 방향	여형범	2016.02.24
2016-11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윤정미	2016.03.03
2016-12	충남 상생산업단지 정책의 성공전략과 추진과제	장수명 외 2명	2016.03.10
2016-13	충남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정책지원 방안	김태연 외 2명	2016.03.17
2016-14	충남도 에너지 정차저장시설 입지지역 지원방안	이민정	2016.03.23
2016-15	충남 중대형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현황과 발전전략	홍원표	2016.03.30
2016-16	충남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안연환 외 2명	2016.04.06
2016-17	충남 포괄적 도민안보체제 구축 방향과 과제	김창수	2016.04.14
2016-18	충남 사업장 폐기물 발생 현황과 매립지 갈등 대응 방향	장용철	2016.04.21
2016-19	충남 어촌 · 어항의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이충훈	2016.04.28
2016-20	충남 지역행복생활권 실태분석과 추진 방향	임형빈 · 한상욱	2016.05.06
2016-21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충남 버스 교통정보체계 구축 방안	김원철 · 정민영	2016.05.12
2016-22	충남 소규모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관률	2016.05.19
2016-23	충남형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 복지	김필두 · 윤준희	2016.05.27
2016-24	충남 폐염전·폐양어장 생태복원과 활용방안	장동호 · 이상진	2016.06.02
2016-25	2040년 충청남도 사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심재현	2016.06.08
2016-26	체계적 환경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충남형 환경보전 DB 구축 필요	명형남	2016.06.17
2016-27	충남 교통SOC 현황과 정책방향 -도로,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김형철 · 장준용	2016.06.22
2016-28	농민기본소득제, 충남도 농촌마을에서 실험하자	박경철 · 강마야	2016.06.30
2016-29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 방안	박경철	2016.07.07
2016-30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지원방안	최영화	2016.07.14
2016-31	전국과 충남의 미세먼지 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 김순태	2016.07.21
2016-32	충남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축제를 육성하자	이인배 외 2명	2016.07.28
2016-33	충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표정기 · 이상신	2016.08.04
2016-34	충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6.08.11
2016-35	자치단체 세외수입의 문제와 개선과제	고승희	2016.08.19
2016-36	충남 어업·어촌 6차산업화를 위한 정책제언	김종화	2016.08.25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